

제2021-1호 (통권 26권)

NEWS LETTER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사업목적

- 한국사회에 적실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집단 육성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공공성 증진 및 학문적 자생력 강화
-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지원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CONTENTS

권두언	04
한국 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박영렬(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지상세미나 : “포스트 코로나, 한국 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한국 행정학의 현안과 과제	08
박순애(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 심리 분야	11
장은진(한국심리학회 회장, 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2021년 팬데믹 시대 한국 언론의 현안	15
양승찬(한국언론학회 회장,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사회과학	18
구인회(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기고 싶은 이야기	21
한국의 미래, 인문사회 연구가 중요하다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제18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ASSREC) 소식	24
학회동정	25
협의회 소식	31
협의회 임원진	33

권두언

한국 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박영렬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현재 한국 사회과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 과학이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코로나19 사태는 사회과학의 위기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은 정원 미달 사태를 비롯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까지 글로벌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큰 재앙이나 변화를 겪지 않았다. 몇 차례 지역간 분쟁이나 경제적 위기가 있었지만 인류에 치명적인 역병이나 전쟁은 없었기에 그럭저럭 버티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인류 생명을 위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그 동안 사회 과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보다는 새로운 기술에 끌려가는 학문적 적응이 대세를 이루었던 것 같다. 그 반면 자연과학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우수 인재들이 대거 전자공학과를 비롯한 공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과대학의 인기를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않았고 사회과학에 대한 가치가 취업으로 연결되면서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었고, 그 이후 우수 인재가 의과 대학으로 대거 몰리기 시작하였다. 자연과학 분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었고 청년들이 산업현장보다는 사무직에 근무하기를 더 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연과학이 고사하는 위기가 왔음을 인지한 과학계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런 각오는 세상의

변화와 맞아 떨어졌고 우리 사회로부터 공감대를 끌어냈다. 그 결과 많은 재원이 자연과학 발전에 투자되었고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한 도움을 스스로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최근 AI 관련 개인 차원의 큰 기부가 KAIST에 이루어진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을 뒷받침하는 사례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기업도 자연과학 분야와의 산학 협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과학이 미래 성장을 위한 기술과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로 체화된 인재를 양성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전쟁과 같은 위기가 없었고 예측가능한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과학으로 하여금 위기 의식을 가지게 하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던 같다. 대학에서는 자연과학 지원자가 줄어들다가 인문과학 지원자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경우는 산업화를 뛰어넘는 민주화가 우리 사회 흐름이 되면서 대학 정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응용 사회과학인 경영학 발전은 졸업 후 취업 기회를 활짝 열어주었다. 사회과학에 대한 인기는 지속되었고 대학본부 역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처로 사회과학 분야를 우선시 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런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업은 경영학 졸업자들을 예전처럼 많이 채용하지 않는 반면 미래 성장에 필요한 공과대학 졸업자를 대거 선발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더 이상 산학협력의 대상으로 생각치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위기가 왔음에도 자연과학과는 다르게 사회과학은

집단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과학의 경우 예를 들면 공학 한림원을 창립하여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하나가 되어 미래 인재 양성에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응용 사회과학인 경영학조차 새로운 협력의 구심점을 생각만 하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과학 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첫째,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매년 초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5개 분야의 리스크, 즉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리고 환경적, 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해법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할 것이다. 그 동안 사회과학은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우리 사회도 이런 문제에 많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탄소 중립성과 같은 환경 문제의 대두는 우리 사회로 하여금 환경을 포함한 기술적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의 대응은 그 동안 커다란 위기가 없었기에 전통적인 접근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가 글로벌 해지면서 이와 같은 사회과학 분야의 문제들이 각각의 문제라기 보다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로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사회과학 분야는 이런 문제의 변화를 적절하게 예측하거나 대응하는데 한계를 나타내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는 사회과학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 문제가 환경과 기술적 문제에 점차적으로 기반을 두게 되면서 자연과학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었고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을 자연과학으로부터 찾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사회과학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 문제들을 제 각기 풀어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회과학은 변해야 한다. 우리는 기술 변화 중심의 사회적 인식을 기술과 함께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즉 사회적 관련성(relevance)이 높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교육 역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reliability) 높은 자료에 대한 축적도 필요할 뿐 아니라 자료에 대한 분석도 엄격해야(rigorous)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과학 분야와 함께 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협력, 연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더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롭고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융합을 위한 연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지 못하는 발전은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다. 경영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은 1990년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과학 분야는 함께 하는 아름다움을 창출하기 보다는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았다. 그 반면 자연과학은 생존을 위한 변신을 거듭하였다. 공과 대학에서 경영학을 자체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산업공학을 통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융합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경영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는 환경 및 기술에 관한 전문성이 없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결국 거대담론만을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향해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경우 시장을 논하면서 시장과 기술을 연결하려는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

이제라도 사회과학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 현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손에 손을 잡고 협력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연결하는 참여와 존경을 우리의 이해관계자들과 나누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자연과학과 함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 사회로 부터 다시금 사랑받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기술은 제품을 만들지만 경영은 시장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사회과학은 자연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우리 사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아름다움을 꽃 피워야만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한국 사회과학이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협력하고 글로벌하게 경쟁해야 한다.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해 각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단순화(simplification)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사회화(socialization)를 통해 집합적 힘(collective power)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과 집중보다는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리면서 불필요한 경쟁만을 일삼고 서로에 대해서는 인식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우리는 선진사회의 구성원이다. 한국 사회과학 역시 이제는 선진국의 그리고 선진사회의 사회과학이 되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재원을 쫓기보다는 학파를 이루려는 노력이 앞서야 하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회도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모두가 행복하려면 각각이 전문화와 단순화를 통해 국내 경쟁력을 함께 높이고, 사회화를 통해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집합적 힘을 축적해야 한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비교할때 시장중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기술은 세계를 동질화 시키고 있지만 시장은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보다는 시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사회과학은 제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잘 그려낸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은 글로벌 1등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협력하고 글로벌하게 집합적 경쟁을 이루어낸다면 사회과학은 세계적인 우리만의 분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경쟁의 생태계를 각각의 대학보다는 학회 혹은 협의회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하반기 어느 정도 진정되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자연과학을 뛰어넘어 사회과학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사회과학이 더 이상의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변화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지상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한국 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주제 : 포스트 코로나, 한국 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1. 한국 행정학의 현안과 과제
박순애(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 한국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 심리 분야
장은진(한국심리학회 회장, 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3. 2021년 팬데믹 시대 한국 언론의 현안
양승찬(한국언론학회 회장,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4.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사회과학
구인회(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지상세미나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3A3079108)

지상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한국 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한국 행정학의 현안과 과제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부정책과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예기치 못한 융·복합형 사회적 난제가 증가하고 있다. 저성장, 사회적 양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기존의 위기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지구촌을 예측불가의 팬데믹 상황으로 내몰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고립은 디지털 문화혁명을 가속화시켰다. 사회적으로는 정인이 사건, n번방 사건 등 정부와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연일 언론에 노출되고 있으며, LH 사건과 백신 수급 문제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망은 추락 일로에 있다. 이에 더해 글로벌 컨설팅기업 보고서들은 한국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전망하고 있다. E7 국가의 경제력이 머지않아 한국을 앞설 것으로 예측되며(PwC 2017:4),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양극화는 정치 과잉의 혼돈에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대에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이 당면한 몇 가지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조직과 기능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가?

오늘날 정부의 모습은 20세기 초반 산업분야에 도입된 테일러리즘의 분업과 전문화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기술 주도의 종적인 정보 흐름과 엄격한 노동 분업을 기반으로 한 정부조직은 20세기 중반 대량생산을 주도한 엘리트 중심의 기업조직을 벤치마킹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기반, 정보 중심의 급변하는 현대사회, 디지털과 민첩함으로 표상되는 시장경제에 과거의 경직적인 계층제

형태는 더 이상 유용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만 보아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얽힌 사회문제를 다루기에 40여 개 이상으로 세분화된 중앙부처 조직이 적합한 형태는 아닌 듯하다. 재산세는 중층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국토교통부 산하에만 10개 이상의 관련 법이 존재하고, 투기억제 및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은 5개 부처에 걸쳐 8개 이상의 법령이 존재한다(박순애 외, 2020: 257-262). 특히 부동산은 금융을 매개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힘든 상황이다.

융합사회에서의 정부 역할

ICT 기반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오늘날에는 기술발전과 사회적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조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n번방 사건으로 발단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는 입법 취지처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고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고 탈세 등 국내외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박순애 외, 2020: 81).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도 무정부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공지능사회의 전환과정

에서 기술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가야 할지, 정부 서비스가 절실한 곳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것인지 이를 위해 정부형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문 간 벽 허물기와 처방학문으로서의 행정학

기획과 집행의 분업, 기능별 영역별 분업은 과거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끌던 시기에는 유효하게 작동했는지 모르지만,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시장지배력이 정부의 역량을 능가하는 오늘에는 기획과 집행의 결합, 융합적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정부형태가 요구된다(박순애, 2021:208). 즉,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접학문 간 협업과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회적 난제들은 산업공학에 서부터 사회학,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문·이과의 경계를 초월한 범학제적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조직, 인사, 재무로 한정되던 행정학이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과 공학에 이르기까지 정부운영에 필요한 모든 학문 분야와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공직자 양성과 행정학

한국 청·장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역량이 뛰어나고(한경연, 2020), 이해 관계가 걸리는 사안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책임진 공무원 한명 한명은 각자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최상의 정책설계자여야 한다. 과거 공직은 고시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였고, 이들은 엘리트로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의 공직자를 채용하는 관문으로서 고시제도는 이제 실효성이 퇴색했다. 5급사무관이 되기 위해 짧으면 3년에서 길면 7~8년의 젊은 청춘을 보내고도 나이 30이 넘어 다른 진로를 찾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단지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평균 5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얻은 지식이 향후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지적이다. 지난 10여 년 공직자를 뽑는 방식이 다양해졌지만 그들이 공직자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지식과 소양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

질 것이고 그 핵심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박순애, 2020: 14).

행정학의 미래

행정인은 공직자의 공과 과를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학이 시장의 실패에 관심을 두고 사안별로 국가 전체의 최적 균형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공직자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때, 이들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론화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이 바로 행정학이다. 행정학은 이론과 현상이 동행하는 처방적 학문으로 시대적 적실성이 중요하다. Dwight Waldo는 행정학의 적실성과 관련하여 행정에 대한 연구나 행정실무가 격동의 시대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시의 적절한 조치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명환, 2018). 행정학은 공공의 영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응용학문이다(Bushouse 외, 2011: 100). 환경이 변하고 수요가 달라지면 정부의 역할과 행동도 창의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지속적인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때때로 이들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질타가 행정학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행정학의 존재 이유가 정부라는 실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상기 한다면 행정학의 위상은 정부 발전과 그 궤를 함께 하며, 學研官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호의존의 관계다. 그러므로 학연관의 협업은 이론 위주의 행정학이 아닌 실생활에서 구현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학문으로서의 가치 발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학자-공무원-시민-현장 전문가가 학식과 경험의 교류를 통해 공진화해 나가는 것이 곧 행정학이 꽃 피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해외 벤치마킹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최전선에 도달한 한국 행정학의 또 다른 과제는 세계 공공부문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할의 중심에 행정학 졸업생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행정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대학원생을 제대로 양성하고 이들을 위한 취업의 장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행정학회는 전국의 학부대학, 대학원, 그리고 연구기관이 더불어 살아가는 학문공동체다. 학부대학의 활력은 대학원 졸업생의 진로와 직결되며, 대학원 및 연구기관의 활성화는 국가발전의 주요 처방을 제시하는 행정학 적실성의 핵심 동력이다.

- 김명환. (2018). 공공가치론과 행정학의 적실성.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p.78.
- 박순애 외. (2020)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정부기능 수행체계 발전 방안. 한국행정학회
- 박순애. (2021) 인공지능시대 정부업무와 성과관리. 엄석진 외. AI와 미래행정. 박영사
- 박순애. (2020)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행정포커스 2020. 07
- 조선비즈. 한국경제연구원 “대학교육 이수율 OECD 1위지만 대졸자 고용률은 최하위.” 2020.12.01.
- Bushouse, B. K., Jacobson, W. S., Lambright, K. T., Llorens, J. J., Morse, R. S., and Poocharoen, O. (2011). Crossing the Divide: Building Bridges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Practitioners and Scholar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 99–112.
- PwC. (2017) The World in 2050. The Long View, How will the global economic order change by 2050?

한국사회과학의 현안과 과제: 심리 분야



장은진

한국심리학회 회장, 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한국심리학의 현안과 과제: 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심리 건강서비스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는 1946년에 창설된 이래로 2021년 현재 75주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회이다. 심리학의 주요 영역별로 구분된 15개의 분과학회¹⁾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학회원들을 모두 합치면 현재 약 50,000여명²⁾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각 분과학회와 모학회는 총 16종의 사회과학 저널을 출간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공헌과 활동들(예: 심리건강 서비스, 자문,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역사나 규모, 그리고 학술 및 사회 공헌 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심리학회는 한국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이다.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실존적 위협과 더불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심리학 분야 역시 전염병 상황에 대한 연구, 심리학적 접근과 더불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본 기고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및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심리학적 접근을 개관하고, 한국심리학회의 역할 및 심리사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1. COVID-19와 심리학적 접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발생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감염 가능성도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피해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특성을 지니므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복합재난으로 볼 수 있다(장은진 2020a).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심리·정서적으로 곤란을 겪으며, 재난 이후에도 환경의 변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관계의 변화 등 장기적인 생활 스트레스로 인하여 2차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하므로(Norris, Friedman, & Watson, 2002), 재난 이후 사람들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우울장애, 자살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2020년 5월에 실시한 '코로나19 발병의 심리적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7.3%가 경미한 외상성 고통, 34.2%가 경미한 우울 증상, 28.8%가 경미한 불안 증상을 호소하였고, 더욱이 23.6%가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여성, 20대 연령층, 실직을 한 경우,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수입이 감소된 경우에는 심리적 고통 수준이 더욱 높게

1) 1분과부터 15분과는 다음과 같음. 제1분과 임상심리학회/제2분과 상담심리학회/제3분과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제4분과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제5분과 발달심리학회/제6분과 인지 및 생물심리학회/제7분과 문화 및 사회문제심리학회/제8분과 건강심리학회/제9분과 여성심리학회/제10분과 소비자·광고심리학회/제11분과 학교심리학회/제12분과 법 심리학회/제13분과 중독심리학회/제14분과 코칭 심리학회/제15분과 심리측정평가학회.

2) 분과학회에 중복 가입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 학회에 직접 가입하여 활동하는 숫자는 약 25,000명에 해당됨.

나타났다(박용천 등, 2020).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0)가 주관하여 3차례(2020년 3월, 5월, 9월 실시)에 걸쳐 진행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각각 48%, 39.7%, 47.7%의 참여자가 경도 이상의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42.5%, 41.2%, 49.2%의 참여자가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코로나19는 개인이 경험하는 긴장 및 두려움뿐만 아니라 유연비어확산, 사회적 불안 및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심리적 갈등이나 집단 트라우마를 유발하기도 하며(허연주, 이민규, 2017; Knudsen, Roman, Johnson & Ducharme, 2005), 실제로 '코로나 블루(우울)', '코로나 레드(분노)'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실직율의 증가, 소비생활의 위축과 이로 인한 생산 활동의 저하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금 생활 전반에 대한 우울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장은진, 2020b). 따라서 감염병의 발생이나 유행 시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심리방역'이란 용어가 등장하였고, 코로나19는 신체질환뿐 아니라 경제, 사회, 심리 영역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대처할 심리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극복과 관련하여 「Rio+20, post-2015 제안서」(United Nations, 2012)에서는 재난의 위험감소와 회복 탄력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회복탄력성(Psychological Resilience)이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나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내적 능력을 일컫는다. 회복 탄력성은 각종 재난상황에서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요인이자 위험감소의 전략으로 알려져 있으며(Höfler, 2014,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8), 훈련과 노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낙관성, 삶의 의미 발견, 높은 자기효능감 등이 해당되며, 개인 외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즉, 가족, 사회, 지역, 나아가 국가 차원의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다. 우리 사회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 역량의 증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개인 내적 및 외적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심리학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2. 국민을 위한 심리건강서비스 실시와 심리사제도

(1) 코로나19 시대 한국심리학회의 역할과 활동

한국심리학회는 학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COVID-19 특별대책위원회(COVID-19 특위)를 구성하여 2020년 3월 초,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상담 및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대국민 무료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인, 격리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집단 감염병 발발 시 보이는 반응과 회복에 대한 가이드를 담은 심리교육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이윤호, 육성필, 2020). 대국민 전화상담은 (사)한국심리학회 소속 최상위 전문가와 전공 교수들이 참여하였고, 학회에서는 위기개입 모델에 기반한 전화상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2020년 3월부터 현재(6월13일)까지 총 1334건의 전화상담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다(이윤호, 육성필, 2020). 심리상담의 주요 문제로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약 22.5%), 코로나19 관련 우울(약 21.2%)이 가장 많았고, 가족 갈등(약 10.3%), 학업 진학 및 취업(약 9.5%)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도 많았다. 이 외에 경제적 어려움, 직장 내 갈등, 양육 스트레스, 기저 정신과 질환도 상담의 주요 문제였다. 특히, 자살행동을 주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육성필, 2020). 한편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간편 심리건강 자가진단 검사" 등을 통해 총 10,660건의 스크리닝 검사가 이루어졌고, 필요할 경우에는 정신건강 및 심리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한국심리학회 상담전화를 안내하고, 1339 콜센터와도 연계하여 상담전화를 연결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체계에서 장기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로 안내하였다.

한국심리학회 소속 회원들은 이 외에도 각종 언론기고, 인터뷰 및 방송출연을 통해 대중이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활동을 하였으며, '1-3 Hello, 어떻게 지내'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본인의 일상을 올리고, 안부가 궁금한 3명의 사람을 링크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본인의 근황을 주변인에게 알리게 하였다. 이렇게 심리적 연결감을 유지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단절감, 고립감, 소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였다(이윤호, 육성필, 2020).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술 발표회를 개최(2020년 12월 5일)하여 코로나 관련 실태와 개인적 특성, 긍정 심리학의 적용, 대처전략, 온오프라인 심리학적 개입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내외 심리학 교수 및 전문가들이 발표 및 참여함으로써 코로나 관련 연구를 공유하였다. 국제 협력 사업도 진행하여 전 세계 심리학 연맹 소속 70여 개 국가의 학회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에서 제작한 유아와 아동을 위한 그림책 공동출판, 정기적인 온라인 회의 등 심리학자들의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취약대상인 유아와 아동에 대해서는 국제심리학연맹과 연대하여 심리방역 동화책 <내 영웅은 너야(My hero is You)>와 동영상³⁾을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여 전국의 유아와 아동들에게 배포하고 있다(장은진 2020a).

(2) 국민의 심리건강을 위한 심리사 제도

대한민국 정신건강 분야의 주요 인력인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기본 자격이 법제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심리학자들이 다양한 장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사의 경우에는 기본 자격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리사들이 국민들의 정신(심리)건강의 예방과 조기개입 제도에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심리사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예를 들어 자살이나 고독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사회적인 요인 조사와 연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리사가 주요 인력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10만명 당 심리사 수와 자살율은 역상관을 보이고 있고, 2013년 OECD는 한국정부에 전 국민 대상 심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장은진 등, 2020c)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이번 감염병 재난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미국, 영국, 호주 등 OECD 국가에서 채택하는 국가전문 자격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매진

하고 있다. 국가 자격 심리사의 법제화를 통해, (1) 강도 높은 교육과 실무 수련을 받은 심리사를 정의하고 육성하며, (2) 한국에 존재하는 수천 종류의 유사 심리서비스 제공자와 전문 심리사를 구분하여 질적 관리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3)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근거-기반의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민의 심리건강을 위한 향후과제

향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재난뿐 아니라,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재난의 발생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재난발생시 인력 구조, 전문성 확보, 전달체계구축 등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여 재난구호시스템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재해구호법 제8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근거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구성되어 2020년 7월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장은진, 2020a). 여기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되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등의 정부부처와 국가트라우마센터,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전문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심리사의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전문가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싶어도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심리건강의 중요성과 심리사가 기여할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국민 심리상담이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리사 인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양성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근거-기반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병리, 상담 및 평가 실습, 발달, 인지, 학습, 성격, 연구 방법 등 심리학 핵심역량을 갖춘 심리사가 국민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심리학 연구결과를 통해 국민과 취약대상에 대한 심리상태와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

3) 유아용(3-5세용, 5분, <https://www.youtube.com/watch?v=DYs8pxNbGy0&feature=youtu.be>), 아동용(6-8세용, 7분, <https://www.youtube.com/watch?v=2uavuR46y7A&feature=youtu.be>) 2가지 동영상을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으로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자료를 토대로 국민들이 지닌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와 각 대상별(예: 연령, 성별, 직업) 특성은 어떠한지, 어떠한 변인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위험요인지(예: 실직이나 수입 감소, 기존의 질환소유), 누가 더 심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예: 사회경제적 약자, 노인, 20~30대 취업준비자, 기존에 정신질환이나 신체 질환을 가진 자) 등에 대해 정확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빅 데이터 기반 자료들을 활용하여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예측 변인을 파악하며, 적절한 평가도구의 개발 및 온라인 기반 심리 서비스 실시 이후 근거기반의 효율성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셋째, 심리적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건전한 마음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급적 모든 교육과정에 심리학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배우게 하고, 동시에 부모교육 등을 제공하여, 심리문제의 예방 및 조기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전략은 위기상황 뿐 아니라 생애주기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키워도록 도울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와 위와 같은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늘도 모든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 인력으로 법제화된 심리사가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심리건강이 향상되고 삶의 질과 행복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8. "912 경주 지진을 간접 경험한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개인 리질리언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공적 신뢰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9(5): 93-116.

박용천, 박기호, 김나은, 이주희, 조수린, 장지희, 정다운, 장은진, 최기홍. 2020. COVID-19, 한국에서의 심리적 영향: 예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4): 355-367

이윤호, 육성필. 2020. Post-COVID-19를 대비한 효과적인 위기개입을 위한 접근과 활동: COVID-19 위기개입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4): 368-381.

육성필. 2020. 8. 20. "코로나 19에서의 위기심리상담 활동" 2020 제74차 한국심리학회 온라인 연차학술대회 특별심포지엄 자료집.

장은진. 2020 a. "코로나 19와 심리방역". 이영한, 이규원 외 25인 (저).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 집단지성 27인의 성찰과 전망(pp.

155-167). 한울(한울아카데미).

장은진. 2020 b. "코로나 19와 심리방역,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신문. 2020. 5. 2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9500124>

장은진 등. 2020 c. 심리서비스 입법연구. 한국심리학회/보건복지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KSTSS.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발표" <http://kstss.kr/?p=1873/>.

허연주, 이민규. 2017.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3): 381-407.

Höfler M. 2014. "Psychological resilience building in disaster reduction: contributions from adult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5: 33-40.

Knudsen H. K., Roman P.M., Johnson J.A., Ducharme L.J. 2005. "A Changed America? The Effects of September 11th on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3): 260-273.

Norris, F. H., Friedman, M. J., & Watson, P. J. 2002. "60,000 Disaster Victims Speak: Part II. Summary and Implications of the Disaster Mental Health Research."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65(3): 240-260.

United Nations. 2012.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15 UN development agenda."

2021년 팬데믹 시대 한국 언론의 현안



양승찬

한국언론학회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2021년 대한민국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매일 경험하면서 환경 감시 역할을 하는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언론사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언론 자유가 확대되었지만 언론의 신뢰도는 선진국 수준에서 볼 때 매우 낮은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재난의 상황은 신뢰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021년 한국 사회의 언론 현상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논의되는 현안은 뉴스의 생산, 유통,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언론 유통 권력인 포털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 확보, 그리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언론 신뢰 구축을 위한 이용자와 시민 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 비대면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확보

2021년 6월 1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신문 9,714건, 일반 일간신문 326건, 일반 주간신문 1,202건, 특수 일간신문 38건, 특수 주간신문 1,670건, 외신 80건으로 신문으로 분류된 등록 매체만 13,03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터넷 신문의 경우 공식적인 등록이 시작된 2005년의 286건과 비교해 볼 때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다양한 성향의 미디어가 등장하여 언론 시장 전반에서 외적인 다양성이 일부 확보되기는

했지만 시장 진입이 쉬워진데 따른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급자가 과도하게 많은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경영의 문제와 공급의 품질확보 문제가 다른 산업 영역과 마찬가지로 언론 영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의 경우 그 영세성이 심각하여 양질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제약이 있다.

경쟁이 심화된 언론 시장 구조 속에서 뉴스 보도의 문제점이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 저널리즘의 규범적 가치가 약화된 가운데, 보도의 정확성, 적절성이 붕괴되고 선정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쓴 기사, 표절 기사, 광고성 기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남재일, 2020).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대안매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전통 뉴스 매체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이용자의 입맛에 맞춘 '해장국 저널리즘'이 정파적 양극화와 갈등을 야기하는데 연결되어 있다. 가벼운 연성 기사 위주로 구성된 뉴스 콘텐츠 수준의 하락과 정파성의 부각은 뉴스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첫 걸음은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즘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자, 언론사의 언론 윤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저널리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원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저널리즘의 원칙과 책무에 충실한 윤리적 언론을 만드는 것은 신뢰 회복을 통해 저널리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시대의 요청이다. 지난 3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한국

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언론윤리헌장'을 공포하고 한국언론학회와 언론 관련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언론윤리실천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언론윤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언론윤리 헌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진실을 추구한다, 2)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다, 3)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4) 공정하게 보도한다, 5) 독립적으로 보도한다, 6) 갈등을 풀고 신뢰를 복돋우는 토론장을 제공한다, 7)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8)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 상충을 경계한다, 9) 디지털 기술로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기 위한 언론 현장과 언론 관련 연구기관, 언론학계의 노력이 동반되어 신뢰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 뉴스 생태계의 영향력자인 포털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 확보
현재 한국 사회의 뉴스 유통 구조를 보면 포털 미디어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와 특정 언론사가 검색 제휴를 맺고 있는가의 여부가 경영의 안정성 및 성과와 직결되어 있다. 개별 언론사가 스스로의 뉴스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디지털 환경의 유통 구조로 인해 콘텐츠의 질적 우수성이 시장에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포털 미디어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조회 수, 페이지뷰 등 단편적 이용자 반응을 토대로 한 상업적 가치가 어뷰징 기사, 연성 기사가 콘텐츠 영역을 장악하게 했다. 또한 포털 미디어의 뉴스 유통에 편입되는가의 여부가 언론사의 재정적 수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뉴스 유통 권력의 지배력이 절대적으로 강화되었다. 뉴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되었고 콘텐츠의 질적 특징에 따른 구독을 통한 수익 창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다. 뉴스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포털 미디어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은 '좋은' 저널리즘이 자리 잡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작동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는 뉴스 편집과 추천은 페이지뷰와 체류시간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윤 추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저널리즘을 전달하기 위한 뉴스 가치와 뉴스 중요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재 등장하고 있다. 2021년 한국 언론 생태계에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통 권력인 포털 미디어의 뉴스의 품질 제고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포털 미디어의 경우 이들이 비록 현행법 체계 안에서 언론사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김위근·황용석, 2020).

○ 언론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 사회의 역할

2020년 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행된 언론신뢰 제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산학연 포럼 결과보고서는 뉴스 미디어의 신뢰 확보를 위한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사회의 언론의 변화를 위해서 생산자와 유통자의 노력과 더불어 이용자인 시민 역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언론에 대한 능동적 감시자, 좋은 언론에 대한 지지자, 탈진실 미디어 환경에서 분별 있는 미디어 학습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일탈적 언론 행위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거부할 수 있고 언론에 대한 공공성의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지 '좋아하는' 언론을 쫓아다니지 않고 '좋은 언론'을 분별할 수 있고 건강한 언론을 후원하는 시민이 등장해야 한다. 뉴스 리더십 역량을 통해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여 숙고할 줄 알고,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부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가 수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Digital News Report 2020)>은 한국 사회의 뉴스 이용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조사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이소은·박아란, 2020). 자신과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하는 뉴스 이용 편향성이 높게 나타난 부분은 선택적 노출과 확증편향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서로 다른 관점의 의견을 듣고 소통한다는 민주주의의 규범적인 가치를 생각해 볼 때 향후 학계의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국언론학회는 한국 언론 현상과 관련한 위와 같은 현안을 학술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14일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언론보도와 저널리즘의 공공성,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팩트 체크의 역할 등을 주제로 기획 세션을 구성하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021년 발족한 특별위원회인 '저널리즘 신뢰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신뢰 회복의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학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한국 언론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회는 6월 발족하는 언론윤리실천 협의회에 다양한 언론 관련 기관과 함께 참여하여 한국 언론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신뢰 회복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위근·황용석(2020). <한국 언론과 포털 뉴스서비스>. 서울: 한국 언론진흥재단

남재일(2020.10.8). 정파성과 함께 하는 정론의 가능성: 정파성 속에서 신뢰받는 언론은 가능한가. 한국언론학회·한겨레신문 공동 주최 신뢰받는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세미나.

이소은·박아란(2020.6). 편향적 뉴스 이용과 언론 신뢰 하락 <Digital News Report 2020> 주요 결과. <Media Issue>, 6권 3호, 1-13.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뉴스미디어의 신뢰·혁신·소통>.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사회과학



구인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사 등 일선 전문가들의 실천과 이들 실천 활동을 규정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응용학문이다. 사회복지학 연구의 대상이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이고 사회의 공적 자원을 이용한 활동이다 보니 일선 전문가들의 실천과 관련 정책의 사회적 책임성이 자주 논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조되는 개념이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making)이다. 정책이 설계 시에 기대했던 목표를 실현하였다는 증거를 통해 그 효과성을 입증하여야 하고, 애초에 정책결정이 그 예상효과에 대한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대한 관심이 사회복지학과 같이 특정한 개입 활동을 연구하는 응용학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에 속하는 다양한 분야들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시민 삶을 개선하는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기초학문 영역에서의 연구성과들이 응용학문의 매개를 통해서 현실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는 사회과학 전체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넓은 범위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증거기반 정책결정 논의는 정책결정이 과학적 연구성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회과학이 증거기반 정책결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현실

사실 현실의 정책결정이 증거기반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수 있다. 우리는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이 좁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사적 이익에 의해 변형되거나 왜곡되고, 심지어는 정책이 이해관계 관철의 수단으로 되는 경우도 보게 된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많은 토목공사, 건축사업들이 전체 사회의 공익보다는 일부 지역주민과 관련 사업자들의 요구와 이익을 반영하여 졸속으로 추진되고, 일부 권력자들은 이에 부화뇌동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예가 적지 않다. 정책이 문제 해결의 실용적 가치보다는 의사결정자의 이념적 선호에 따라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현실의 정책결정이 사적 이해관계나 이념적 지향에 얽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관련자들 사이의 주장이 공공정책의 효과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한 결과 정책결정자들은 정책 추진의 책임에 대해 선거와 여론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진 정책결정자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고, 이들은 정책 결정 시에 관련 연구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사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정책에 활용하기 좋게 잘 정리된 연구결과가 부족한 것이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느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사회과학이 다양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깊이 천착하여 정책적 해결방안을 충분히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년이 넘는 기간 진행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나 보편, 선별 등의 지원방식을 둘러싸고 상이한 주장들이 맞섰고, 그 피해구제 정도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하였다. 하지만 사회과학계에서 연구성과를 통해 이들 정책논쟁에 대해 답안을 제시하는 데에 충분히 역할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국책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일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지만, 성과보다는 부족함이 더 느껴진다. 물론 사회과학계도 변명할 바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같은 기본적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기대하기 어렵다.

2.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행정데이터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설계적 연구를 인과관계 추론의 기준으로 삼는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의 효과는 개입 상황에서 나타난 실제 결과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설적 상황에서 나타났을 반사실적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반사실적 결과를 관찰할 수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작위 할당을 통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설정, 실험집단에 대한 개입 후 두 집단의 결과 비교를 수행하는 실험설계 연구에서 찾게 된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엄밀한 실험설계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정책 실시 등의 자연실험적 상황을 연구설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사회과학에서 정책평가와 인과관계 추론에서 또 하나의 큰 장애는 데이터 확보에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대상 모집단에서 조사 대상자를 뽑고 그 대상자로부터 설문에 응답을 받는 서베이 방식으로 연구 자료를 얻었다. 그러나 조사의 협력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조사 비용은 늘어나는 한편, 조사 내용은 한층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서베이 자료의 한계는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부 등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행정데이터는 해당 서비스 대상자 전수의 자격과 급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일정한 정제와 결합의 과정을 거친다면 매우 유용한 연구 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 서구 선진 각국에서는 행정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예가 늘고 있다. 복지국가 제도를 일찍부터 발전시킨 북유럽 국가들은 행정데이터로 국민 전수에 대한 등록부를 구축하여 인구센서스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행정 데이터의 디지털화 작업을 시작했다. 행정 데이터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18년부터는 영국 행정데이터 연구(Administrative Data Research UK, ADR UK)라는 조직의 구축을 통해 결실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2016년 증거기반정책결정위원회(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를 수립하고 2018년에는 증거기반정책결정기본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을 제정하여 연방데이터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주정부 등 일부 지방정부들도 행정자료 구축과 활용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행정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제공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2020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를 담은 행정데이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3. 행정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행정데이터는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형성되는 서비스 대상자 전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자료를 정제하고 정부의 여러 부처,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다른 행정데이터와 연계하고 결합한 자료 구축을 통해서 그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데이터의 정비와 연계, 결합, 그리고 행정데이터에 대한 공익적 연구의 활성화 등을 추진할 중심 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기관과 법제가 개인정보 보호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간 정부는 행정데이터 등 빅데이터 활용에서 주로 의료분야 등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다른 한편에서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를 민간 영리부문에 노출하는 것에 반발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요구하였다. 행정데이터의 공익적, 학술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공개, 활용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대립이 부상하게 된 데에는 사회과학 등 학계의 무관심이 기여를 하였다. 사실 우리 학계의 주류를 이루는 대학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연구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고, 공공

정책의 연구는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에 소속한 연구자들의 몫처럼 되었다. 이러한 학계의 연구편향은 우리나라 행정데이터의 전산화 수준과 연계, 결합 용이성 등 행정데이터 인프라의 잠재력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행정 데이터를 공익적, 학술적 활용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원천으로 보고 행정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가 균형되게 추진되도록 우리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4. 사회과학, 무엇을 할 것인가?

이공계 학문분야에서 산학협력이 중시되는 만큼, 사회과학계에서는 정책분석과 평가의 영역에서 공공부문과의 협력이 중시되어야 한다. 증거기반 정책결정은 이러한 관학협력의 핵심고리를 이룬다. 정책결정자들은 사회과학의 연구성과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회과학계는 현실 정책결정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거를 산출하는 노력을 늘려야 한다. 사회과학계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과학의 이론이 현실과 넓게 접점을 형성하게 하고 현실 속에서의 이론 검증을 통해 학문적 발전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의 정책적 지향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 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는 우리 학문의 궁극적인 존재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마땅한 일이다.

이제 빅데이터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과학계는 행정데이터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행정데이터는 적절한 연계, 결합과 서베이 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연구활용 가치를 지닌다. 더 나아가 행정데이터는 모든 사회과학적 연구에 요구되는 조사비용을 낮추고 연구 데이터의 질을 높여 한국 사회과학의 역량을 크게 높이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행정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사회과학계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미래, 인문사회 연구가 중요하다*



임 현 진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제18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지성사적으로 볼 때 사회과학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도 뿌리를 같이한다. 동양의 공자, 맹자, 장자와 서양의 Socrates, Platon, Aristoteles 등은 모두 인간, 사회, 자연, 우주를 총합적으로 다루었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인문, 사회, 자연 분야의 학문으로 현실적 편의를 위해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최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대자연의 질서를 회복하지 않는 한 생태계의 교란에 따른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물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켜온 이른바 '인류세' (Anthropocene)의 파국이 멀지 않을 수 있다.

근래의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 빈번한 팬데믹의 위기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명과학과 같은 과학기술에 해결의 기대를 걸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본원적 이기심과 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병의 극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인문학적 지혜와 사회과학적 해법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분으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한국의 대표적 기업의 CEO는 오래전 우리가 세계에서 생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상상력아래 과학기술이 선봉에 서지만 그것을 국가적 정체성아래 최종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사회과학적 지식이라고 했다. 인문사회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뼈있는 지적이다

벼랑 끝에 선 한국

한국이 '인구 데드크로스'에 마주했다. 지난해 일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출생아 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1962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된 이래 인구 감소가 일어난 것이 처음이다. 예상한 것보다 3년 정도 앞당겨졌다. 오래전부터 가족이 무너지고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전체가구 중 일인가구 비율이 지난해 30퍼센트를 넘었다. 앞으로 20년안에 과반수를 넘을 전망이다. 문제는 젊은이들이 연애, 취업, 주거, 양육, 교육 등을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데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시군구 215곳 중 절반이 인구소멸의 위험이 있고, 3,400 읍면동 중 1,383 곳이 사라질 수 있다. 대도시 빼놓고 전남, 전북, 경북, 경남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의 많은 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고 적지 않은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퍼센트에서 15퍼센트에 도달하는데 일본이 24년 걸렸다면 우리는 19년만에 돌파했다. 불과 2년전 2019년 일이다.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국가재난 시기에나 나타나는 0.8 이하의 초(超)저출산율을 2020년에 기록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아래 이미 2016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앞으로 생산과 소비가 멈추는 인구절벽 → 성장절벽 → 재정절벽 → 국가절벽이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상할 수 있다. 20년 후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이 52세로 올라가고, 대략 25%의 일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노령자와 14세

이하 유년층을 먹여 살려야 한다. 2056년이면 젊은 세대 100명이 부양해야 할 어린이와 노인이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 들고 유년과 노년의 부양인구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도 둔화될 것이다. 교육, 산업, 국방에 부가하여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지만 경제성장이 뒷받쳐 주지 못해 한국의 재정적자가 나빠질 것이다. 올해말 정부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위험수준인 GDP의 70%에 도달할 수 있다.

한국의 인구는 이제 5,200만명을 정점으로 내리막 길로 접어들어 2096년에는 반 토막이 되고, 2136년 1000만명 급기야 2275년 제로가 된다. 한국이 지도에서 지워질 수 있다. 물론 세계 지도에서 없어질 나라가 비단 대한민국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전문가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교수는 OECD 35개 국가 중 '인구소멸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를 한 바 있다.

최악의 반목, 진영 대립

우리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향해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촛불혁명이후 민주주의를 부활시킨 광장이 정파적 이해충돌로 인해 심각하게 갈라져 있다. 해방이후 최악의 분열과 반목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조국대전' 이후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친(親)여 '문빠'들과 반(反)문 '박빠' 등이 적대적으로 부딪쳐 왔다. 이들은 가짜뉴스, 허위정보, 댓글조작, 편파방송을 통해 동조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선전, 선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일부 정치인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대중의 감정을 등에 업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사실은 가려지고 허구가 만들어진다. 대중은 특정 정치인을 단순히 지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과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하면서 '빠'로 세력화 된다. 정치의 팬덤화다. 서로를 믿지 못하다 보니 불신이 불통과 불화를 키우고 각기 확증편향아래 이성적 토론 보다 감정적 비방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계층, 이념, 세대, 젠더, 노사 갈등에 더하여 진영대립이 최악으로 나가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경제성장과 사회 복지를 잘 조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힌다. 이들의 성취는 공공의 제도와 신뢰의 문화아래 포용적 사회경제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특히 소통과 대화의 문화에 바탕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고용, 성장, 분배, 복지의 선순환을 가져왔다.

이렇듯이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게 된 나라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으면서도 사회제도와 공공정책의 측면에서 앞서갔음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 삼권분립, 개인자유, 사유재산권, 시민참여, 민관협치 등 사회제도가 확립되고 산업, 무역, 사회, 노동, 환경 등 공공정책을 정비함으로써 후진의 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협력과 책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경우 고등교육에 관한 대학정책에 비해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문정책은 주변적이다. 기초학문은 투자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응용학문은 이에 대한 기반없이 발전할 수 있다. 인문, 자연, 사회, 예술 분야의 기초교육이 바로 서야 공학, 의학, 기술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은 R&D 강국이지만 2020년 기준으로 국가전체 연구개발비 27.2조원 중 인문사회 분야는 2,900억원으로 고작 1.1%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학술연구를 총괄하는 연구재단의 경우 전체 7.2조원 연구비 중 인문사회계는 3.5%에 불과한 2,4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의 기초연구의 부실은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은 물론 장래 균형발전을 위한 학문적 기반의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책당국의 학문연구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얼마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의 혁신이란 미명아래 과학기술계에서 주로 활용해온 규준과 절차를 인문사회 계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개정법률안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의 독자성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과학기술부가 부처이기 주의로도 모자라 학문정책을 관료주의적으로 오도하는 발상과 행태는 인문사회과학의 자율적이고 통섭적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그것이 지니는 기초학문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실사회에 대한 실용성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 부문에 의해 단기적인 정책과제를 부여받음으로써 일종의 청소부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사회과학이 우리 나름의 자아존거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 연구계획아래 우리 문제에 대한 독자적 성찰을 위한 연구 과제를 다년 복합과제로 엮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영대립, 사회갈등,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양극화, 조세와 복지, 민족통일 등의 사회 문제를 학술적,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인문사회과학은 서로 연계아래 중장기 연구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한국사회에 걸맞는 자생적 지식생산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인문학은 대중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 '사회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은 학문적 뿌리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사회는 무궁무진한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수입에서 지식창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기본자료를 체계화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적 이론화와 정책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은 분단국가임에도 경제력의 하드 파워와 문화력의 소프트 파워를 합쳐 세계 20권안에 들어간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지만 이른바 30-50클럽이라 할 강중국(advanced middle power)으로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흔히 질풍노도로 비유되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인문사회과학의 학술적이고 정책적 공헌은 매우 컸다고 자부할 수 있다. 사랑과 증오, 인간과 자연,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 자유와 평등, 축적과 복지, 안전과 행복 등의 다양한 가치지향을 공공성의 차원에서 조합함으로써 오늘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부족한대로 견인해 온 것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오늘의 한국의 현실을 겸허히 반추(反芻)하면서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문사회과학의 상상력과 창발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인문사회 학술연구진흥과 국가 연구개발 운용체계 개혁방향 학술 토론회>, 2021년 3월 31일 기조 발표문의 일부이다.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ASSREC) 소식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AASSREC)는 2021년 10월 19-21일, “Navigating the future with and after Covid-19: The role of social sciences in Asia.” 라는 주제로 제24회 AASSREC Biennial General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임. Covid-19로 인해 컨퍼런스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하며 Covid-19 사태로 인해 변화된 무역, 관광, 교육, 공공보건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임. 각 세션은 1.5-2시간 동안 열릴 예정이며 컨퍼런스 참가 및 발표에 관한 문의는 AASSREC Secretary-General, Michelle Bruce (michelle.bruce@socialsciences.org.au)



학회동정

경제사학회

■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음.

- 일시 : 2021년 5월 29일(토) 14:00 ~ 17:00
- 장소 :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 회의

국제협력개발학회

■ 2021 DMZ 포럼 세션 개최

- 주제 :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 플랫폼 구축의 의의와 역할
- 일시 : 2021년 5월 22일 (토) 11:00-14:30
- 주최 : 국제개발협력학회, 경기도
- 후원 : 통일부

■ 2021 광주민주포럼

- 주제 : (세션명) 민주주의와 국제개발협력(ODA) 현황과 과제
- 일시 : 2021년 5월 21일(금) 12:00-14:00
- 주최 :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광주민주포럼, 5·18기념재단

■ 국제평화토론회 개최

- 주제 :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ODA와 경기도 역할 (Implementation of HDP Nexus for Local Government in Asia-Pacific Regions and the Role of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14:00-16:00
- 주최 :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경기도

■ 2021 국제보건협력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개발협력: 개발협력 보건정책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 형성
- 일시 : 2021년 3월 6일(금) 12:00-17:30
- 주최 :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KOFIH)

■ 2021 평창평화포럼

- 주제 : 한반도 평화 공적개발원조(ODA)와 공동외교 역할
- 일시 : 2021년 2월 8일(월) 17:00-18:40(100분)
- 주최 : 국제개발협력학회, 한국공공외교학회, 한국 평화활동학회, KCOC

■ 학회총서 발간

ICT4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 전문가가 들려주는 ICT4D 정보통신기술과 국제개발 협력 (이희진, 한울2021)

대한지리학회

■ 대한지리학회 35대 회장으로 황철수(경희대학교 지리학과)교수가 취임하였음. 임기는 2021. 01. 01~ 2022. 12. 31 (2년)임)

■ 2021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

- 일시 : 2021년 6월 25일(금)
- 장소 :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홈페이지(온라인(비대면) 학술대회)
- 주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리와 공간

한국경영학회

■ 2021년 5월 27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주최하여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과 시장친화적 규제”를 주제로 춘계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함.

■ 5월 28일에는 제1차 KASBA 콜로키움(주니어위원회 주관)을 개최함

■ 6월 23일, 제1차 한국경영학회 2030 포럼을 개최함

■ 하반기에는 제2차 KASBA 콜로키움(주니어위원회 주관)과 8월 16일-18일간 “하계융합학술대회(주제 :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

한국경제학회

- 1985년 창간한 영문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SSCI 및 Scopus 등재학술지인 The Korean Economic Review(KER), Vol.36, NO.2 발간 (2021.1.1.) 하였음.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이며, 연 4회(1.31, 4.30, 7.31, 10.30) 발간되는 『한국경제포럼』 제13집 제4호 겨울호 발간 (2021.1.31.) 하였음.
- 2021년 2월 4일(목) 2020년도 정기총회 개최 (2021. 2. 4.(목), 13:15~14:00, 대면 회의 및 Zoom 이용한 비대면 회의 동시 개최하였으며 신임회장에 정진욱교수(연세대 경제학부)가 취임함.
 - 1) 명예회장에 이인호 회원(서울대 경제학부) 추대
 - 2) 회장에 정진욱 회원(연세대 경제학부) 취임
 - 3) 청람상 수상 : 박응용 교수(서울대) 수상
 - 4) 제5회 한국경제학술상 수상
 - 범 미시 분야 : 최지원 교수(한양대), 황지수 교수(한국외대) 공저
 - 범 거시 분야 : 편주현 교수(고려대), 박성식 박사(공간의 가치) 공저
 - 5) 제8회 『경제학연구』 우수논문상 수상 : 김지운 교수(홍익대) 논문 수상
-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1. 2. 4.(목) ~ 5(금))
 - 1) 주제 : 코로나 사태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및 미래, 코로나 19 이후 한국경제의 과제
 - 2) 개최 : Virtual Webinar Conference (단, 제1, 2 전체회의만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개최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층 영원홀)
 - 3) 참가 학회 : 53개 경제학 관련 학회
 - 4) 2개 전체회의, 6개 분과회의의 128개 분야 396편의 논문 발표, 사회자 140명, 논평자 393명 참가
- 정책포럼 개최 (2021. 3. 17(수), 14:30-17:30)
 - 1) 주제 :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백신보급의 경제적 효과
 - 2) 공동 주최 : 한국경제학회, 국민경제자문회의
 - 3) 개최 : 대한상의 중회의실A, 코로나19로 유튜브 생중계 진행
- 『경제학연구』 제69집 제1호 발간 (2021. 3. 31.) 및 제69집 제2호 발간 예정 (2021. 6. 30.)
 『경제학연구』는 국내 경제학 학술지 가운데 가장 긴 역사(1953년 창간)를 자랑하는 한국경제학회의 대표 학술지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는 경제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경제학연구 우수논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연구』는 연 4회(3.31, 6.30, 9.30, 12.31) 발간됩니다.
-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2021. 5. 27(목), 14:30-17:00)
 - 1) 주제 :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시장친화적 규제
 - 2) 공동 주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 3) 개최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코로나19로 유튜브 생중계 진행
- 한국경제학회 2021년도 수석부회장(2022년도 회장) 선출
 한국경제학회 2021년도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지난 5.10일부터 5.27일까지 진행되었고, 6/2일(수) 개표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수석부회장(2022년도(제52대) 회장)으로 이종화 교수님(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이 선출되었습니다.
- 학회 홈페이지에 <경제토론> 사이트 오픈
 <경제토론>은 경제학자들 간의 토론을 위해 마련하였음. 시카고 대학의 IGM Forum(igmchicago.org)을 모델로 하여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임.

한국교육학회

- 한국교육학회는 2021년 2월 28일「교육학연구」 제59권 1호를 그리고 2021년 4월 30일에는 2호를 발행하였다. 제1호에는 총 1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2호에는 1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 제45대 1차 정기이사회가 2021년 2월 5일(금) 11시 한국교육학회 회의실(비대면 회의)에서 개최되다.
- 제45대 회장단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의원실과 곽상도 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교육부, 미래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실을 방문하고 기관장들과 면담하였다.
- 한국교육학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과 2021년 3월 5일 한국교육학회 회의실(비대면 협약식)에서 MOU를 체결하였다.
- 2021년 연차학술대회(Webinar)가 다음과 같이 개최될 계획이다.
 - 대주제 : 한국,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육
 - 2021년 연차학술대회 주제: 한국교육 진단, 미래 교육의 설계와 운영
 - 일자 : 2021년 6월 25일(금) ~ 26일(토)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및 교육관

한국국제정치학회

-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2021년 6월 30일(수) - 7월 2일(금)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중언의 시대와 한국 국제정치학”이라는 주제로 2021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인류학회

- 2021. 01. 한국문화인류학회 홍석준 회장 취임
2021년 01월부터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홍석준 교수가 한국문화인류학회 학회장으로 취임하였음.
- 2021. 03.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 19 전수 검사 철회 성명서> 발표
한국문화인류학회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 19 전수 검사 행정명령 철회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2021.03. 한국문화인류학 54(1)호 발간
「안전의 열망과 기여의 의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서사, 호혜성을 관찰하기», 「제주 잠녀 : 한국 해녀와 신유교, 이중의 신화를 시작으로 환경 파국 시대의 생물 문화적 희망한 민족지적 연구」등을 수록한 『한국문화인류학』54(1)호가 발간되었음.
- 2021. 06.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 춘계 학술대회를 2021년 6월 18~19일(금-토) <지역문화 조사 및 문화콘텐츠 창출에서 인류학과 구술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한국사회복지학회

- 2021년 1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음
- 2021년 2월,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Vol 15, No. 1을 발간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학 제73권 제1호를 발간하였음.

- 2021년 3월,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 신청하였으며, 2021년 4월 공동모금회 삼성지정기탁사업(코로나19와 아동청소년의 교육불평등 연구 및 학술대회) 추진함. 또한 2021년 5월에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코로나19 공존상황에서의 사회안전망 평가 및 포스트코로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연구) 추진함
- 하반기에 개최될 공동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아시아학술교류 심포지엄 추진하고 있음.
 - 주제 : 포스트코로나, 사회복지의 혁신과 재구성
 - 일자 : 2021년 10월 22일~23일(금~토)

한국사회학회

- 2021년 4월 1일, 한국일보 · 한국사회학회 공동 연중 기획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 좌담회를 개최 <한국일보 기사> (사진포함)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722270004472>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722120002959>
 -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IPJr-GTLZ88&feature=emb_title
- 세미나 개최 : 공정성, 지속가능성장의 조건
 -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13:30-16:30
 -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YouTube 생중계
 - 주최 : 경기연구원, 한국사회학회
 - 주관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www.dropbox.com/sh/xje1shijqlzkjx6/AADETCrl65wDAGvOl4ws8y0ga?dl=0>

- 제1회 뉴노멀포럼 <백신의 과학과 포스트 코로나> 개최
 - 행사명 : 백신의 과학과 포스트 코로나(제1회 뉴노멀 포럼)
 -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14:00-16: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제1회의실 (오프라인과 웹엑스를 통한 웨비나 동시 진행)
 - 주제 : 백신의 과학과 포스트 코로나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복잡계학회
 - 공동주관 :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 제2회 뉴노멀 포럼 <인구절벽 쓰나미가 온다 : 세대 갈등의 서막> 개최
 - 행사명 : 인구절벽 쓰나미가 온다: 세대 갈등의 서막
 - 일시 : 2021년 5월 24일(월) 14:30-17:00
 - 웹엑스 링크 : <https://skku-ict.webex.com/meet/chamber2>
 - 주제 : MZ세대 코로나 일상과 정해진 미래
 - 주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 공동개최 : 한국복잡계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는 2021년 1월 심리검사인증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장훈장학회 심리학 관련 학위 논문 조사 후원 사업을 하였다. 2021년 한국심리학회 APA MOU 영구 갱신하였다.
- 2021년 1월과 2월 한국심리학회 소식지 2021년 1월호와 2월호를 발간하였다.
- 2021년 2월, 2021 한국심리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2021년 3월, 2021년 서던포스트 심리학 연구 후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40권 1호 발간하였다. 또한 한국심리학회 소식지 2021년 3월호를 발간하였다.

- 2021년 4월, 한국심리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런칭하였으며 한국심리학회 크리에이터 기자단 1기 모집 및 활동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심리학회 소식지 2021년 4월호를 발간하였다.
- 2021년 5월, 심리서비스법 법률1인(가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심리사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인근 지역 전문가 초청)하였다. 또한 한국심리학회 소식지 2021년 5월호를 발간하였다.
- 2021년 6월, 2021년 Doctoral Colloquium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심리학회 소식지 2021년 6월호를 발간하였다.

한국언론학회

- 한국언론학회 <돌봄 연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세미나 개최
 - 주제 : 돌봄 연계 미디어리터러시-코로나19에 대처하는 미디어리터러시 실천과 전략
 - 일시 : 2021년 1월 29일(금) 14:30 - 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
 - 주최 : 한국언론학회
- <해외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 정책 방안> 세미나 개최
 - 일시 : 2021년 3월 2일(화) 15:00-17:10
 - 장소 :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장
 - 방식 : 온라인 중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세미나 참여자와 취재진만 현장 입장 가능으로 제한 예정입니다. 실시간 중계 주소는 당일 오전 공지)
 - 주최 : 한국언론학회, 국회의원 정필모, 국회의원 한준호
- 한국언론학회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 장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 온라인 병행

한국여성학회

- 제1차 학술포럼 개최
 - 2021. 4. 16. 2021년 제1차 학술포럼 <의존과 자립 그리고 친밀한 통제 : 경계에 선 장애여성의 삶과 실천> 개최
-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토론회 개최
 - 2021. 4. 27 한국여성학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주최 긴급토론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개최
- 춘계학술대회 개최
 - 2021년 6월 19일, 2021년 춘계학술대회 <포스트성장 사회와 페미니즘 돌봄 전환> 개최

한국정치학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를 주제로 특별기획학술대회 개최
 -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2021년 2월 25일(목)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안보와 국가안보”를 주제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병행한 특별기획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광주광역시가 후원하고 5.18기념재단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였다.
- “자치분권의 시대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 모색”을 주제로 공동기획학술회의 개최
 -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2021년 6월 4일(금) 대전 DCC컨벤션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기획학술회의를 “자치분권의 시대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 모색”을 주제로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행정안전부, 대통령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하고 경기연구원, 경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였다.

한국행정학회

■ “2020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주제 : 코로나19 이후 이민정책 제도화와 이민자 지원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일시 : 2021년 1월 28일(목) 13:00
- 장소 : 한국이민정책학회 사무실 및 온라인 Zoom 회의
- 공동주최 :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 기획세미나 개최

- 주제 : 공무원 채용 및 교육
- 일시 : 2021년 3월 12일(금) 13:30 ~ 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1동 113호
- 형식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온라인 참여 링크: 행사시간에 <https://snu.webex.com/meet/aicgspa>로 접속)
- 주관 : 한국행정학회
- 주최 : 한국행정학회 · 인사혁신처 ·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센터

■ 서울시-자치구 생생·협력을 위한 사무 권한 재정립 토론회 개최

- 주제 : 서울시-자치구 생생·협력을 위한 사무 권한 재정립 토론회
- 일시 : 2021년 3월 23일(화)
- 장소 :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 및 유튜브 생중계
- 주관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 주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학회, 국회의원 서영교 · 김성환 · 김영배 · 이해식 의원실

■ 기획세미나

- 주제 : 전환기 한국의 가치갈등과 ‘통합/조화’의 난제 : 행정-정치 이종창을 위한 이론적 기초 탐색
- 일시 : 2021년 5월 21일(금) 13:3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13호
- 형식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주관 : 한국행정학회 행정사상과방법론연구회
- 주최 : 한국행정학회,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센터

■ 미래 100년 특별위원회 제2차 온라인 세미나

- 일시 : 2021년 5월 28일(금) 15:00-17:00
- 장소 : Zoom 회의실 참가 링크
한국행정학회 ·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학술회의
- 주제 : 자치분권의 시대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 모색
- 일시 : 2021년 6월 4일(금) 10:00~18:30
- 장소 : DCC대전컨벤션센터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
- 공동주최 : 한국행정학회 · 한국정치학회
- 공동주관 : 경기연구원, 경남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 2021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주제 :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정부와 관료제의 재구조화 : 디지털 대전환과 팬데믹의 시대를 중심으로
-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6월 25일(금)
-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한국행정학보(3월 25일 / 6월 25일) 및 IRPA(영문학보, 3월 31일 / 6월 31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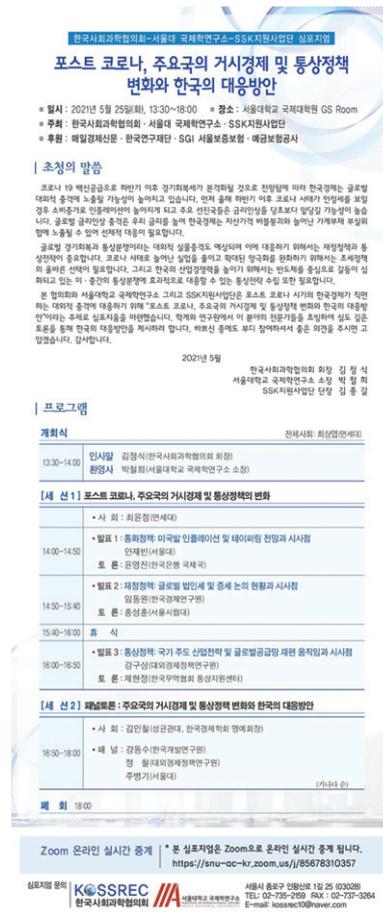
■ 한국행정포럼(소식지, 3월 31일 / 6월 31일) 발간

협의회 소식

01

심포지엄 개최

본 협의회는 2021년 5월 25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GS룸에서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SSK 지원사업단과 공동주최로 “포스트 코로나,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함.



한국사회과학협의회-서울대 국제학연구소-SSK지원사업단 심포지엄

포스트 코로나,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일시: 2021년 5월 25일(화), 13:3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S Room
 ■ 주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SSK지원사업단
 ■ 후원: 매일경제신문, 한국연구재단, SGI 서울보증보험, 매일보험공사

초청의 말씀

코로나 19 확산속으로 하반기 이후 장기화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경제는 글로벌 대외적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이후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소비충격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고 주요 선진국들은 금리인상을 당초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금리인상 충격은 우리 금리를 높여 한국경제는 자산가격 비등화와 높은 인건비 부담에 부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통상협약이라는 대외적 상황중에도 역산되어 국내 대응을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상정책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늘어난 실업률 줄이기와 확대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중간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전략 수립 또한 필요합니다.

본 협의회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그리고 SSK지원사업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경제가 직면하는 대외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학계와 연구원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선 증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김 경 식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박 철 희
 SSK지원사업단 단장 김 중 길

프로그램

개회식	전체사회: 최성연(연세대)
13:30-14:00	인사말: 김경식(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환영사: 박철희(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장)
【세션 1】 포스트 코로나,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통상정책의 변화	
	· 사회: 최용진(연세대)
14:00-14:30	· 발표 1: 통화정책: 미국발 인플레이션 및 테이버링 현상과 시사점 양재민(서울대) 토론: 윤영진(한국은행 국제부)
14:30-15:40	· 발표 2: 재정정책: 글로벌 법인세 및 중세 논의 현황과 시사점 임동원(한국연구재단 구본) 토론: 홍상훈(서울시립대)
15:40-16:00	휴식
16:00-16:30	· 발표 3: 통상정책: 국가 주도 산업정책 및 글로벌금융채권 유착일과 시사점 김구성(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 채현정(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세션 2】 폐쇄포럼: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사회: 김인철(삼광경제,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16:30-18:00	· 패널: 강동수(한국개발연구원) 정 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병기(서울대) (가나다 순)
폐회	18:00

Zoom 온라인 실시간 중계 * 본 심포지엄은 Zoom으로 온라인 실시간 중계 됩니다.
<https://anu-oc-kr.zoom.us/j/85678310357>

심포지엄 후원: K@SSREC,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서울대 동문구 연합신문 1층 25 03028
 TEL: 02-735-2659 FAX: 02-737-5264 E-mail: kossrec@naver.com

02

중국사회과학원(CASS)에서 발간하는 “当代韩国”에 수록할 논문요청을 받아 한국경제학회에서 추천한 목정환박사(한국은행)의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국내 핀테크 동향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를 중심으로,”가 “当代韩国”에 게재되었음. 논문제목: 金融科技对金融稳定的影响及启示——以韩国金融金融科技发展动向与金融稳定风险评估为中心 게재 학술지: <CONTEMPORARY KOREA> (当代韩国), 2021년 제1기, 79-88쪽, 주관기관: 중국사회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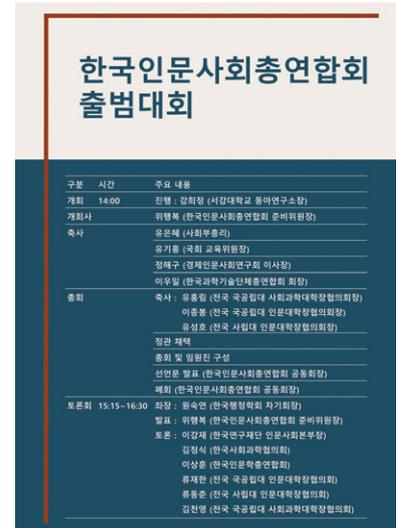
当代韩国 (季刊)

1993年创刊 2021年第1期(总第108期) 3月25日出版

特稿	编辑
中美战略竞争: 韩国的认知与回应	凌胜利 杨 颖 3
中美战略竞争: 日本的认知与回应	金 新 韩杰豪 21
政治与外交	
文在寅政府对朝政策: 内涵、困境与出路 ——基于新功能主义的分析	唐伟男 34
韩国智库对美国大选的研判及影响分析 ——以韩国外交安保研究所和战略研究所为例	姚寰宇 崔明旭 50
新冠疫情背景下中日韩粮食安全合作的空间与战略	王紫桐 朱一 67
经济与社会	
金融科技对金融稳定的影响及启示 ——以韩国金融科技发展趋向与金融稳定风险评估为中心 [韩] 魏植焕 著 叶 京 编译 朴光海 校译	79
节俭式创新: 韩国社会企业发展现状与创新模式分析	胡 敏 王佳桐 [韩] 郭源竣 89
历史	
全面抗战时期韩国抗日力量的正式形成与发展 ——以朝鲜义勇队为中心	刘 鑫 101
东亚视域下的大谷光瑞与朝鲜半岛 征韩启事	范宏涛 115
	128

03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인사총) 설립에 참여

인문, 사회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인문학총연합회, 한국사회과학 협의회, 전국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사회과학대학 장협의회, 전국사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등 5개 단체는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를 창립하기로 합의하고 2021년 3월 30일(화) 오후 2시-4시30분까지 한양대 국제문화관 122호에서 창립총회와 출범대회를 개최함



04 한국심리학회의 요청으로 세계심리학회 서울 개최 지지서한 발송

한국심리학회는 2028년 6월 25-30일 열리게 되는 제34회 세계심리학회의 서울 개최 유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본 협의회는 2021년 3월 26일 이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냄

05 이시간담회 개최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2021년 상반기 이시간담회를 6월 23일 서면으로 개최함

06 KSSJ 저널 발간

2021년 6월 1일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vol.48, no.1을 발간 배포함



협의회 임원진

회장단

	성명	소속	비고
회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전)한국경제학회 회장
부회장	김남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현)한국정치학회 회장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현)한국경영학회 회장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현)한국사회학회 회장
	장은진	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현)한국심리학회 회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현)한국교육학회 회장
감사	배금찬	국립외교원 정치학	
	한광석	부산대 경제학	

이사회 (성명 가나다순)

성명	소속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

집행위원회

분 과	성 명	소 속	비 고
연 구	홍 순 만	연세대 행정학	위원장
	김 석 호	서울대 사회학	
	김 옥 태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	
	박 정 수	서강대 경제학	
	배 영	송실대 정보사회학	
	서 은 국	연세대 심리학	
편 집	안 재 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경제학	위원장
	권 헌 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법학	
	조 명 환	서울시립대 경제학	
	최 성 주	경희대 행정학	
	하 병 천	서강대 경영학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	송 영 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학	위원장
	김 세 건	강원대 인류학	
	박 경 미	전북대 정치외교학	
	박 상 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행정학	
	박 은 실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	
	이 승 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사 무 국	김 광 환	연세대 경제학	국장

운영협의위원회

학 회	성 명	소 속
경제사학회	이상철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개발협력학회	김성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대한지리학회	황철수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한국경영학회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한국경제학회	정진욱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국교육학회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한국국제정치학회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국문화인류학회	홍석준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한국사회복지학회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사회학회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한국심리학회	장은진	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한국언론학회	양승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한국여성학회	이혜숙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한국정치학회	김남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국행정학회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사직동)

T. 02-735-2159 F. 0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 Inwangsan-ro 1 Gil (Sajik-dong), Jongro-Ku, Seoul, 03028, Korea

T. 82-2-735-2159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발행인 _ 김정식

발행처 _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일 _ 2021년 6월